

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

<목 차>

1.저축은행 부실여신 및 금융사고 방지

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금융위원회	작 성 자	이름	최상아
	담당부서 (과)	중소금융과		직급	5급
	국장	윤창호		연락처	02-2100-2993
	과장	신진창		이 메 일	choisa@korea.kr

중소서민금융정책관

윤창호 (서명)

< 규제 개요 >

기본 정보	1.규제사무명	저축은행 부실여신 및 금융사고 방지		
	2.규제조문	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, 제40조의2, 제40조의3		
	3.위임법령	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1조의6		
	4.유형	신설	5.입법예고	'17.7.28.~9.6.
규제의 필요성	6.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저축은행의 여신관리 미흡에 따른 대규모 부실화, 대출모집 과정에서의 고객정보 유출 등에 대한 법령상 제재 근거가 미흡 - 저축은행의 여신심사·사후관리 기준은 감독규정상 권고사항으로, 부실방지 등에 한계 - 또한, 저축은행은 은행과 달리 금융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위 보고·공시 의무가 없음 		
	7.규제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여신심사시 원칙·방법·절차 등 여신업무기준의 세부 내용 규정 ○ 임직원의 사기·횡령 등 방지대책, 과거 발생한 금융사고의 재발방지대책, 자체점검·평가계획 등 저축은행이 정하여야 하는 금융사고 방지대책의 주요 내용 마련 		
	8.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	상호저축은행(79개사)		
	9.기대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실대출 방지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관리기준의 세부 내용을 마련하여, - 저축은행의 건전한 여신관리를 유도하고 여신관리 미흡에 따른 대규모 부실화 및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 		
규제의 적정성	10.영향평가 여부	기술영향평가	중기영향평가	경쟁영향평가
		해당 없음	해당 없음	해당 없음
규제의 적정성	11.비용편익 분석 (정성분석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험관리기준에 관한 법령상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안으로 저축은행에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○ 현재 저축은행은 일정규모 이상의 예금인출에 대한 보고 의무에 따라 보고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- 일정 규모이상의 금융사고 발생을 보고사유로 추가한다 하더라도 해당 업무를 하는데 있어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		
기타	12.일몰설정 여부	해당 없음		

<조문 대비표>

현행	개정안
제22조(보고 등) ①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10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유발 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감독원장 또는 중앙회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 또는 중앙회회장에 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감독원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	제22조(보고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 나----- -----.
② 시행령 제7조제4항 본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” 이 란 사유발생일 전월말 현재의 예 금등 합계액 잔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.	② ---- 제7조제4항제1호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시행령 제7조제4항 단서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”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.	③ ---- 제7조제4항제1호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④ 시행령 제7조제4항제2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” 란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고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상호저 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

제40조의2 (여신운용 원칙) ①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차주의 리스크 특성, 재무상태,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
2. 차주의 차입목적, 소요자금규모, 자금소요기간, 실제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한 적정한 여신의 공급
3. 여신 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용도의 유용 방지
4.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

이상(회수예상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.)의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. 다만, 그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와 감독원장이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직접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40조의2 (여신업무 기준) ①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의6제4항제1호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1. ----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----
----- 신용리스크-----

2. ----- 차입금규모, 상환기간 -----
----- 심사 및 분석 -----
3. 차주의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 대책 마련
4. 여신실행 이후 차주-----
----- 사후 점검 ----

치

5. 산업별, 고객그룹별 등으로 여
신운용의 다양화를 통한 여신편
중 현상의 방지

② (생략)

<신설>

--

5. ----- 여신운용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0조의3 (금융사고 예방대책) 상
호저축은행은 법 제22조의2제1항
및 시행령 제11조의6제4항제2호
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
금융사고 관리 및 예방, 이용자 정
보보호 등에 관한 대책 등을 마련
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금융사고 관리에
관한 사항

가.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의 사
기·횡령·배임·절도·금
품수수 등 범죄협의를 있는
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

나. 과거에 발생한 금융사고 또
는 이와 유사한 금융사고에
대한 재발 방지 대책

다.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
업무처리로 상호저축은행 이
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
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
대책

2. 금융사고 예방대책 이행상황에
대한 점검·평가 등 본·지점의

제40조의3 (생략)

제42조(경영공시 등) ① ~ ④ (생략)

⑤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 공시 전에 그 내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

⑥ (생략)

제46조(경영개선권고) ①·② (생략)

③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상호저축은행 또는 관련 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.

업무운영에 관한 자체적인 검사 계획 및 검사 실시 기준

3. 저축은행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저축은행상품의 홍보판매 등의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저축은행 이용자의 정보이용 기준 및 절차

4. 전산사무, 현금수송사무 등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검사기법 개발·운영 대책 및 이와 관련된 금융사고 예방대책

제40조의4 (현행 제40조의3과 같음)

제42조(경영공시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-----

----- . 다만, 법 제10조의 2제3항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⑥ (현행과 같음)

제46조(경영개선권고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금융위는 -----

-----.

④감독원장이 제1항에 의한 권고
를 한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지
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
다.

<삭 제>

I.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

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- ☐ 저축은행의 여신관리 미흡에 따른 대규모 부실화, 대출모집 과정에서의 고객정보 유출 등에 대한 법령상 제재 근거가 미흡
- 저축은행의 여신심사·사후관리 기준은 감독규정상 권고사항으로, 부실방지 등에 한계
- 또한, 저축은행은 은행과 달리 금융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위 보고 의무가 없음

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

- ☐ (대안의 내용) 부실대출 방지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관리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
 - 금융위 보고 대상인 금융사고의 기준(손실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)을 마련
- ☐ (선택 근거) 현행 저축은행의 여신심사·사후관리 기준은 감독규정상 권고사항으로, 부실방지 등에 한계
 - 또한, 저축은행은 은행과 달리 금융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위 보고 의무가 없는 바, 금융사고 발생 예방 및 대처에 한계가 있어 이를 의무화 할 필요

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이해관계자명	주요 내용	조치결과
금융감독원	금융감독원에서도 위험관리기준에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기준, 금융사고 예방 관련 의무 명시 및 금융사고 보고 의무 마련 필요성에 동의	특이사항 없음
금융회사 등	입법예고로 의견 수렴	

3. 기대 효과

- ☐ 부실대출 방지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관리기준의 규정 근거 및 위반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
 - 저축은행의 건전한 여신관리를 유도하고 여신관리 미흡에 따른 대규모 부실화 및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

II. 규제의 적정성

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- ☐ (규제목적) 부실대출 방지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관리기준의 규정 근거 및 위반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
 - 저축은행의 건전한 여신관리를 유도하고 여신관리 미흡에 따른 대규모 부실화 및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
- ☐ (규제수단) 은행법은 금융사고 예방 대책 마련 및 보고 의무는 이미 규정되어 있으며, 부실대출 방지는 입법 추진 중인 사항으로 타 업권 대비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움

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- ☐ 해당사항 없음

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
○ 타법사례

- 은행법에는 금융사고 예방 대책 마련 및 금융사고 보고 의무가 이미 규정*되어 있음

* 은행법 제3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

- 또한, 은행법 개정안('16.10.21.입법예고)에 부실대출 방지를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반영하여 추진 중

III. 규제의 실효성

1. 규제의 순응도

○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
- 저축은행은 여신관리 기준 및 금융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,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 사고를 보고하는 규제를 충분히 준수 가능하며, 금감원의 검사·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

○ 규제 차등화 방안

- 여신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대책이 포함된 위험관리기준 준수 및 금융사고 보고 의무는 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든 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할 사항이며, 금융회사 역량에 따른 차등 규제는 부적합

2. 규제의 집행가능성

○ 행정적 집행가능성

- 현재 저축은행은 일정규모 이상의 예금인출에 대한 보고의무에 따라 보고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금융사고 보고의무를 추가하여도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 없음

○ 재정적 집행가능성

- 현재 저축은행은 일정규모 이상의 예금인출에 대한 보고의무에 따라 금융위에 보고하고 있어 금융사고 보고의무를 추가하여도 규제를 집행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음

IV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1. 추진 경과

- '17.5월까지 금융감독원과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저축은행 부실대출 방지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및 금융사고 보고의무 신설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령에 반영

2. 향후 평가계획

-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, 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

3. 종합결론

- 부실대출 방지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관리기준의 규정 근거 및 위반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사고 발생시 보고의무를 신설하여,
 - 저축은행의 건전한 여신관리를 유도하고, 여신관리 미흡에 따른 대규모 부실화 및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 달성을 기대